

# 포용국가를 위한 청소년 정책

2020.5.11(월) 11:30, 이정옥 장관(여성가족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혁신하자’라는 목표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9개 부처와 협력하여 오늘 설명드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의 정책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활동모델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하여 각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한 청소년정책도 전 세계에 확산해나가겠습니다.

한편, 디지털·글로벌화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 환경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체험관과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민간 수련시설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찾고 싶은 복지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쉼터를 개보수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같이 또래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인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관련기

관 간 연계를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발굴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폭력 등 긴급개입이 필요한 고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검사 등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특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센터로 연계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반학생과의 지원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학습·문화활동·진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으로 이행기 단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하는 한편, 특히 위기상황에 놓이기 쉬운 가출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와 피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사이버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한 보호체계로 유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청소년 담당 상담·복지시설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무료 법률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앱 중에서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충하여 신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이 노동보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그간 청소년 대상으로만 추진했던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도 사업주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호텔 등 관광 분야 숙박업은 교육·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교육을 허용하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노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간 청소년 관련 법에서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 법 체계, 용어, 규정 등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 관련 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청

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상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수련, 문화, 교류활동으로 정의한 청소년활동의 개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 유형 개편을 추진하고, 청소년 중심이라는 원칙아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적극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부처에 청소년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정책 전담 공무원 확충도 지속 독려하여 지역사회의 정책 전문성 및 관리 역량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상담·치유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섯다운제 적용 예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 기피사유였던 ‘입소사실의 보호자 고지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출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시스템 개선을 통해 검진표 수령까지 소요기간도 4주에서 1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과 교육활동의 분절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청소년시설,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청소년 활동지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확산하겠습니다.

향후 정책과제별 릴레이포럼 등을 통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청소년 1명, 1명 다양한 꿈을 마음껏 키워나가고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후기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이 후기청소년 대책은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건지, 근데 왜 지금 상황에서 후기청소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정책 담당관 지정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처럼 만들게 되는 것인지, 그럼 이게 운영

이라든가, 운영 같은 것도 그것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주요업무가 뭔지 이게 연계, 청소년정책 연계성을 높인다는 것 말고 좀 더 주요 업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저희가 이렇게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24세인데 그 24세까지 청소년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24세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사회로 바로 받을 댈기에는 현재 사회의 뭐랄까, 진입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속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에 있어서 예비교육이 필요하고, 또 후기청소년의 다른 청년대책에서도 후기청소년들의 성년으로 또는 완전한 사회인으로 자기책임하에 자기주도적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과도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이게 협의가 되어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이행기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정책지원을 더욱더 세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여가부가 주무부처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군데로 통합이 된다면 또는 방향성, 예를 들면 청소년 주도성이라든가 청소년 눈높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참여라든가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을 상호조율하기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청소년정책은 주로 안전망, 사각지대, 위기청소년 보호 이런 차원으로 정책이 구성되어서 지역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대책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위기청소년의 보호차원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의견, 청소년의 참여 이런 의견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청소년정책관 제도의 개설을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무자가 한 10여 명이 짜여 있고, 또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가 되어서 아직 청소년정책 담당관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만큼의 제도적 기반은 갖추지 않고 초기에 이러한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공유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정할 우려가 있는 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례가 예전에는 없었는지, 이걸 여성가족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가족부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건지. 세 번째, 특정고시 ‘5월 중 행정예고’ 쓰여 있는데요. 특정고시나 이런 절차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이제 n번방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설정이 되고 대부분의 초기 만남의 주선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만났다가 아니면 단순한 대화상대를 생각하고 만나는 과정이 이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대개 대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랜덤채팅앱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누구나 굉장히 쉽게 접촉이 가능한데, 이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앱을 활용하여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로 이전이 되는 과정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입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하려면 이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해매체물 지정은 저희 여가부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서 유해매체물의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매체물 지정권은 저희 여가부에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특정고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국장님께서.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을 주셨던 랜덤채팅앱 중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특정고시의 내용에는 저희들이 예고할 내용이 우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명성에 기초해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인증도 안 되고 있고 실제로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내용에는 첫 번째, 실명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됩니다. 그게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인증을 하도록 그 기능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증해서 앱을 활용할 때 대화저장 기능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대화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있을 때 앱 개발자나 앱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앱은 저희들이 성인은 사용할 수 있으되, 청소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언제 고시를 할 거냐?’, 저희가 5월 13일에 행정예고를 하게 돼있고요. 법상 행정예고는 약 20일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6월 초까지 하게 되고요. 행정예고 결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도 받게 되고요. 행정 내부적으로 법제 심사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요. 이런 랜덤채팅앱이 대략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채팅앱을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해매체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앱이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렇게 따로 공지가 되는 건지 공개적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

<답변> (관계자) 우선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여러 기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따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랜덤앱 조사했던 내용들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랜덤채팅앱 특정 고시라는 게 하나하나 개별 앱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거를 취소하고 이거 삭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앱은 과거에 있던 앱이나 현재에 있던 앱이나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앱, 어떤 앱이든 간에 이 유형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현재도 지정할 것이고 앞으로도 새로 생길 때 지정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게 특정 개별적인 앱보다는 일반적 이런 특성을 가진 앱을 규제해서 지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 \*\*\*

<답변> (관계자) 지정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이거는 성인들만 쓸 수밖에 없는 앱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위기 청소년들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방식이나 각 부처 기관별 협조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장관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에 흉폭해지고 잔인해지는 청소년사건 관련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관련된 판단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위기청소년이 경찰청에 가출청소년, 또 학교에 자퇴 청소년 또 이렇게 다양한 시설에서 이렇게 관할하거나 또는 관할의 대상이 되는 데 빠져나가 있거나 이래서 이거를 범부처간 통합으로, 특히 저희는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고자 하는 것을 큰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틀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서 한 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또 더 큰 청소년의 안전망을 위한 보호와 개인정보의 개인신상 보호와 이 2개의 사이에서 저희가 정책의 조율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2개의 법 규제 사이에서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각지대 없이 안전망을 지원하려는 이 2개의 사이에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좀 더 통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대응체계를 다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오전에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지금 하다가 논의하다가 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정부정책 전반도 강력한 처벌과, 또 소년이나 이런 아동청소년의 용서받을 수 있는, 뭐랄까, 권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지금 저희가 미국·독일이나 일본 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서 14세로 조금 더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영미법 체계에서는 대체로 12세, 13세 등 조금 더 자기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활세계의 문화가 많이 영미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13세,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서 한 중학교, 촉법소년 연령을 한 13세로까지 하향하는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나 여가부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환경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규제의 사각상태에 있었던 것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지 장기적으로 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